

“잡고보니 또...” 광주·전남경찰 범법행위

공공질서 지켜야 할 경찰이 지갑 훔치고 부하 성추행까지 복무 기강 해이 ‘도마’... 신뢰 위기, 임용·교육 실질화 시급

광주·전남 일선 경찰관들이 공공질서 유지 책무를 커녕, 도리어 범법행위를 저질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18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나주경찰은 골프장 탈의실 사물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광주 서부서 모 지구대 A경사를 입건했다.

A경사는 지난 13일 낮 12시 30분께 나주시 한 골프장 탈의실 사물함에서 현금·수표 700만 원이 든 지갑 등 총 80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경사는 다른 이용객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훔쳐 본 사물함 잠금 비밀번호를 누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장 달아난 A경사는 뒤늦게 골프장 측에 유실물을 습득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으나, 경찰 추궁에 못 이겨 범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A경사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와 별개로 검찰 조사를 벌여 징계 절차에 나선다.

광주에서 절도 행각을 저지른 현직

경찰관은 최근 3년 사이 3명이다. 3명 모두 공요롭게도 서부경찰서 소속이자, 치안 최일선에 선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들이었다.

전직 경찰관 B씨는 서부서 모 파출소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12월 18일 새벽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 유리 쇼케이스 벽을 공구로 깨고 침입, 2540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쳤다. B씨는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8억 대 상당의 도박을 하다 발생한 부채를 갚고자, 차량 번호판을 미리 가리는 등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절도·건조물 침입·상습도박·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해 지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에 앞서 B씨는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서부서 모 지구대 경위였던 C씨도 올해 8월 21일 퇴근길 관할지 내 한 공동주택 거처대에 놓인 자전거(40만 원 상당)를 훔쳐 최근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다. 해임 징계에 따라 공직 역시 떠났다.

전남에선 부하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산 일선서 소속 경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D경위는 지난 7월 말 함께 근무하는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각종 증거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D경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D경위는 우선 직위해제됐으며, 성비위 처리 지침에 따라 경찰청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올해 광주·전남에선 내부 갑질,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 수당 무더기 부당 수령 등 각종 도덕적 해이도 잇따랐다.

이밖에 관리 부실에 따른 피의자 도주 사건이 잇따르며 문란한 기강도 못마를 맞았다. 파출소 피습 상황에서 대피에 급급했던 여수 경찰관들도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경찰의 잇단 비위·일탈에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은 들끓었다. 경찰 내에서도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수처다’,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 ‘참답하고 서글프다’ 등 반응이 나오며 술렁였다.

절도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찰관

은 극소수이며 개인 차원 일탈인 만큼, 조직 기강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추락하는 신뢰를 회복하려면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조선의 참여자지21 대표는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관의 잇단 범죄를 본 시민들은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며 “광주경찰청은 지난 자전거 절도 직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내부 교육을 약속했지만 수 개월 만에 또 경찰관이 시민 재산을 훔쳤다”고 했다.

이어 “채용 단계에서 제대로 된 검증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부터 따져봐야 한다. 발령 이후 공직 윤리 교육, 각종 훈련이 형식적이지 않은 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광주·전남경찰은 이날 중 연말연시 전후 2주간 감찰에 나선다. 해마다 전국 각 지방청 단위로 펼쳐지는 정기 일제이다.

그러나 광주청은 최근 골프장 절도 사건을 계기로 고삐를 더 쥘다. 지난 16일 신안 경찰서 5곳 서장에게 직접 복무 기강·개인 일탈 행위 예방을 위해 힘쓰라고 지시했다. 만약 경찰서 내 비위가 발생하면 서장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 동부소방,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스티커 홍보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역 사회에 다문화 가정 구성원과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한글과 외국어(영어)가 동시 표기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광주 남부소방,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및 의무의행 위한 교육

광주 남부소방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의무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여수소방, 여수시 사고예방 위한 소방공무원 대상 전문교육

여수소방서는 직원의 민원업무 처리 및 소방특별조사 등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소방관계법령, 화재안전기준 및 각종 자격증 등 중점내용에 대해 주기적인 강의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무안소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 시행 홍보

무안소방서는 2022년 12월 1일자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법령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무안=이성기기자



광양소방, 위험물 취약시설 현지방문 지도

광양소방서는 동절기를 맞아 최근 관내 위험물 취약시설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광양=김현근기자



나주경찰,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간담회 개최

나주경찰서장은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와 공동체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나주=송준표기자

설 명절엔 “실내 마스크 벗을수 있을까”...로드맵 이번주 확정

부분 착용-전면 해제...2단계 방안 유력

정부와 방역 당국이 이번주 전문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실내 마스크 완화 기준에 대한 로드맵을 이번주 확정한다.

아직 코로나19 7차 유행이 확산하고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상황인 만큼 마스크 의무 해제는 유석열 정부의 방역 시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23일 발표할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방안에는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한 단계적 완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지난 15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방역 당국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방안의 초안이 나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토론회 자리에서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겨두는 1단계 완화 방안과 대부분의 상황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 방안 등 단계적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오는 19일 회

의를 열고 이 같은 마스크 의무 조정방안을 논의한다. 사실상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최종 확정하기 전 마지막 의견수렴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시기는 미지수다.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은 1월 말 이후, 늦어도 3월 사이 마스크 의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대전, 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내년 1월 중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던 만큼 정부와 방역 당국도 가급적 내년 1월 말 설 연휴 이전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발제를 맡은 감염병 자문위원인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미 현 시점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할 여건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유행 규모 감소 ▲치명률 감소 ▲의료대응 능력 ▲사회적 위험인식 등 4가지 기준 중 사회적 위험인식을 제외한 3가지 요소는 충족했다고 봤다.

올해 전파력이 높고 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이 유행함에 따라 백신 또는 감염으로 면역을 얻은 사람이 늘어 5차, 6차, 7차 유행이 반복될수록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박항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날짜를 먼저 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마스크 의무 해제를 꼭 지금 논의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2월 들어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쉬운 겨울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다 BN.1 등 신규 변이가 확산되면서 일일 확진자 수는 8만명대에 진입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도 2주 후 하루 10만명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BN.1과 BQ.1 계열 바이러스의 검출률을 합치면 약 25%로 1월 중에는 우세종이 돼 유행이 더 거릴 것이고 백신 접종률도 낮다”며 “병상과 의료대응체계, 백신 접종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엉뚱하게 실내 마스크 해제를 내세우다니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도 “마스크를 벗었을 때의 확진자 수를 시뮬레이션 한다면 확진자 수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할 때 확진자 수나 중증·사망자 수, 접종률 등 명확한 지표가 아닌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도 과학적 근거보다는 정부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교체된 지영미 신임 질병관리청장이 여론 등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 있다.

익명의 감염병 전문가는 “질병청장 자리는 국가 수장의 힘을 받아야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동시에 외부의 정치적 영향을 받기도 쉽다”며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전문가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이슬기자



정부, 실내 마스크 완화 기준 이번주 발표

정부와 방역 당국이 이번주 전문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실내 마스크 완화 기준에 대한 로드맵을 이번주 확정한다. 정부가 23일 발표할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방안에는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한 단계적 완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서점의 마스크 착용 안내문.

정부와 방역 당국이 이번주 전문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실내 마스크 완화 기준에 대한 로드맵을 이번주 확정한다. 정부가 23일 발표할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방안에는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한 단계적 완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서점의 마스크 착용 안내문.

이슬비기자